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2. 13. 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3년 11월 9일

나. 발 의 자: 신흥식 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: 2023년 11월 14일

라. 상정일자: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

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(2023. 11. 27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신흥식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공무원 등에 대한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확대하여 주민권리 강화에 기여하고 자 함.
- 나. 주요내용
-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의 근거를 「지방공무원법」으로 명시함(안 제4조 제1항)
- 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 중대비위에 대한 신고기한 신설(안 제4조 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○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함에 있어 신고기한을 확대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.

O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4조(신고기한)제1항은 부조리 신고기한을 「지방공무원법」제73조의2제 1항의 근거조항을 기재하여 징계시효 만료일까지 함을 명확히 하였으며,안 제4조(신고기한)제2항에서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년,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15년이 되는 날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중대 부조리 행위에 대해 신고기한을 현행보다 대폭 확대함.

○ 검토 결과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는 영등 포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2008 년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임.
- 안 제4조제1항은 현 조례에서 부조리 신고기한을 행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하고 금품 수수 및 공금 횡령 등과 관련된 사항은 행위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는 규정을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로 변경함. 이는 상위법인 「지방공무원법」에 현 조례의 내용이 포함되어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.
- 안 제4조제2항은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와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7년 및 15년까지 신고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.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조리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「형법」 상 뇌물죄와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상 뇌물죄의 시효기한에 준하여 정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기한을 연장한 것임.
-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제도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임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, 본 개정을 통해 영등포구공직자로 하여금 부조리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신흥식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250 번 호 발의연월일: 2023. 11. .

발 의 자: 신흥식 \ 우경란 \ 양송이

이규선 '임헌호 의원

(5인)

1. 제안이유

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「지방공무원법」 징계시효 만료일을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신고기한을 확대하여 주민권리 강 화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부과 사유의 시효규정을 준용(안 제4조 제1항)
- 나.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의 중대비위 신고기한 신설(안 제4조 제2항)

3. 개정안: "별첨"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법」제73조의2,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「형사소송법」 제249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반영
- 다. 입법예고(2023. 11. 10. ~ 11. 14.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부조리 신고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 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년,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15년이 되는 날까지 신고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4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접수된 신고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신고기한) 부조리 신고는	제4조(신고기한) ① 부조리 신고
행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	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3조의
지 한다. 다만, 금품 및 향응수	2제1항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
수와 공금의 횡령·유용과 관련	<u>까지 한다</u> .
된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	
5년이 되는 날까지 한다.	
<u><신 설></u>	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
	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
	에는 7년, 1억 원 이상일 경우에
	는 15년이 되는 날까지 신고할
	<u>수 있다.</u>